

## 중국의 신인프라건설(新基建) 정책이 우리 '디지털 뉴딜'에 주는 시사점

### 요약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각국의 경기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 뉴딜 사업인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표현했고, 중국 정부는 '신인프라건설(新基建, 신기건)'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명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5G,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분야를 발표했다. 한국 역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에 맞추어 각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투자계획을 속도감 있게 발표하고 있다. 기업 역시 기업 특색에 맞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다소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신인프라건설 정책의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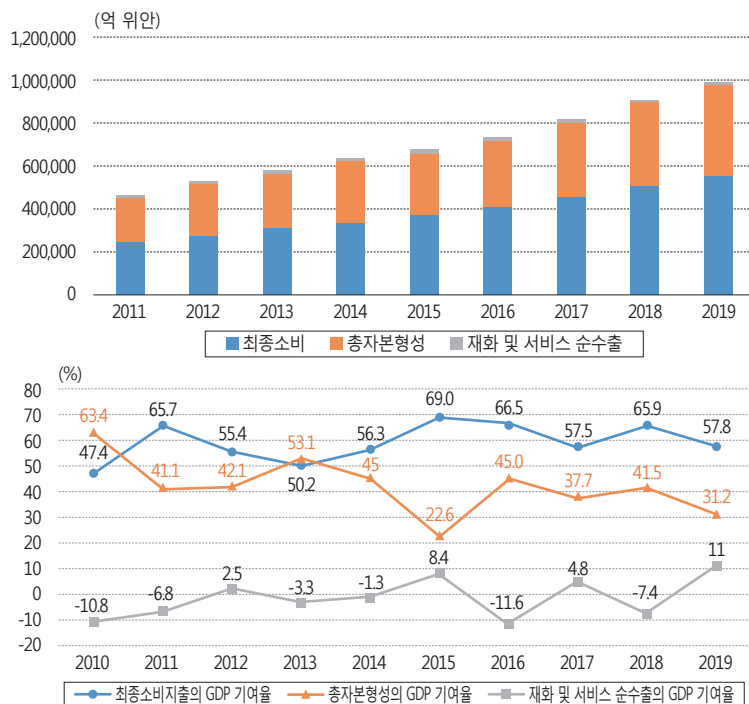
2019년 현재, 중국의 최종 소비지출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58%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투자의 성장 기여율도 30%가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소비-투자-수출로 이어지는 중국 경제의 성장 축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안정적 경제성장과 소강(小康)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에 새로운 정책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중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반영된 중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전분기(2019년 4분기) 대비로는 무려

12.8%포인트 감소했다. 199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 이래 처음 경험하는 마이너스 성장이자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올해 진행된 양회(兩會)에서는 이례적으로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성장위기 탈피를 위해 중국 정부가 꺼내든 정책이 바로 ‘신(新)인프라건설’이다. ‘신기건(新基建)’으로 불리는 중국정부의 신투자계획인 ‘디지털 인프라 사업’은 총 34조 위안 규모다. 중국 GDP의 34%에 해당하는 규모(2019년 기준)로 일관적인 토목건설 중심의 인프라 사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 중국의 GDP 구성과 소비, 투자, 순수출의 GDP 기여율 변화



자료 : 중국 통계국.

## 2. 중국 신인프라건설 정책의 주요 내용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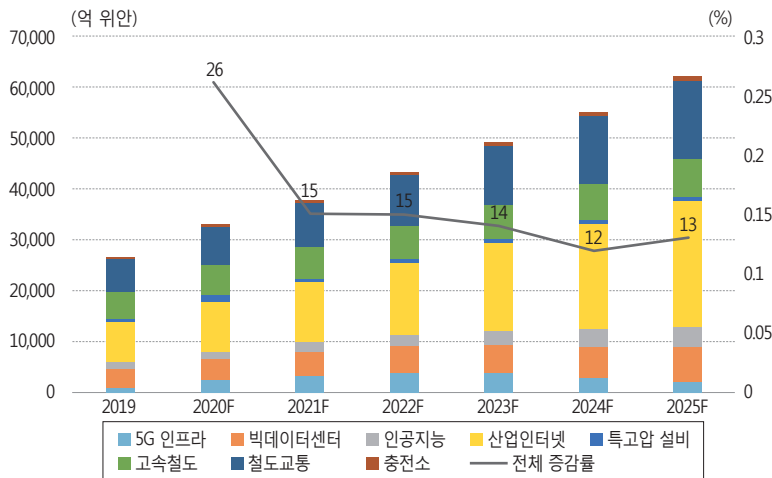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기존의 인프라 사업 즉 철도, 도로, 공항, 항구, 수리시설 등의 건설이 중국 경제발전 에 지금까지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이 본 궤도에 오른 현재 더 이상 중국 경제발 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정 부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과 함께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신인프라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신기건'은 5G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구축 등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이다. 중점 투자분야는 5G 기지국, 네트워크,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 네트워크, 특고압 설비, 고속철도, 철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및 충전소 등이다.

인프라 투자는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매년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이

다. SOC가 중심인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는 지금 까지의 경기 불황을 타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하지만, 경제에 과잉생산과 같은 일련의 부작용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15년 11월 중국 정부는 공급개혁을 통해 산업구조를 최 적화하고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신인프라건설' 역시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이 기대된다.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 인터넷 등 신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투자 수요 를 발생시켜 내수 촉진과 안정적인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신인프라건설 관련 투자 규모 는 2020년 약 3조 위안이며, 매년 15% 이상 증액 하여 2025년에는 6조 위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인프라건설'은 각 지방정부의

〈그림 2〉 신인프라 투자 규모 전망



자료: 中泰证券研究部(2020), 反弹买什么? 新基建、新消费和生物安全法.

중점 건설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3월 현재 베이징, 허베이, 산시, 상하이 등 25개 성에서 1만 7,257개 프로젝트, 총 42조 위안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sup>1)</sup>

## (2) 주요 내용

‘신인프라건설’의 7개 분야는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5G 인프라,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다. 두 번째 영역은 교통 및 에너지 등 전통적인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다. 5G 인프라,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센터는 디지털화된 정보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는 인프라로 스마트 사회를 위한 기반사업이다. ‘신인프라건설’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국민경제 각 분야의 인프라를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하는데 기여하면서 경제의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신인프라건설’은 크

게 정보통신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3대 분야로 구분되며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신인프라건설’은 디지털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5G 기지국 및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우수한 산업자원을 유치함으로써 인재 육성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의 ‘신인프라건설’ 계획 발표 이후, 각 성에서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상하이시 신인프라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방안(上海市推进新型基础设施建设行动方案(2020~2022))’을 통해 총 3단계에 걸쳐 3만 4,000개의 5G 기지국, 100개 이상의 무인 공장, 10만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45개의 택시 충전소 건설 등 48개 프로젝트에 2,700억 위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sup>2)</sup> 상하이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역시 관련 시행계획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 前瞻产业研究院(2020,4), 新基建起舞-2020年中国新基建产业报告.

2) 科技日报(2020,05,08), 未来3年建3.4万个5G基站 上海“新基建”方案出炉(<http://news.cctv.com/2020/05/08/ART1xv27LN6QEPu-EhCNQnayq200508.shtml>)

〈표 1〉 IT 기반 신인프라의 주요 내용

	내용	주요 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인프라 구축	- (IT 인프라) 5G, 사물인터넷, 위성인터넷 등 - (신기술 인프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 (해시레이트 인프라)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융합 인프라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인프라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융합 인프라를 촉진	- 스마트교통 인프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등
혁신 인프라	- 과학연구원, 기술개발, 제품 연구개발 등 공공 특성을 가진 인프라 시설 구축	-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시설, 산업기술 혁신 인프라 등

자료 : 苏宁技术研究院(2020,6), 新基建风口下, 零售科技企业如何借势发展.

주 : 해시레이트(Hash Rate)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채굴 연산 난이도를 의미.

### 3.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과 한중 비교

#### (1) 우리나라 뉴딜의 주요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단기적인 고용대책을 통한 장기적인 새 일자리 창출, 대대적인 경제 회복, 경제활력 뒷받침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등 4가지 목적을 담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되는데, 이 중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언택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5가지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 2022년까지 총 13조 4,000억원이 투

자되며, 이를 통해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은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이다. 정부는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14만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전망이다.

#### (2) 한중 비교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 모두 미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ICT 중심의 인프라 구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양국 모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

〈표 2〉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	22년까지 예상
D·N·A <sup>1)</sup> 생태계 강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sup>2)</sup> 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1, 2, 3차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재정투자 6조 4,000억원 일자리 22만 2,000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재정투자 8,000억원 일자리 1만 5,000개
비대면 산업 육성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구축 ·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재정투자 1조 4,000억원 일자리 2만 8,000개
SOC 디지털화	· 4대 핵심시설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재정투자 4조 8,000억원 일자리 6만 5,000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 : 1)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

2) 국민 체감도가 높은 금융과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

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시티 건설이 목표이며 그 핵심에 5G 기술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또한 양국 모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업률 상승과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5G 보급 측면에서 한국이 다소 밀리는 양상이다. 한국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5G 관련 콘텐츠 및 후방 산업 등의 부족으로 가입자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중국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5G 장비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5G 가입자수도 4월 현재 약 5,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중 간 무역분쟁에 따른 강도 높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이자 스마트시티 건설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중앙-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부의 미래 비전에 맞추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IT 수준이 가장 발전한 광둥성을 예로 들어

보면, 이미 2013년부터 ‘광둥성 정보화 발전계획’(广东省信息化发展规划(2013~2020年))이 발표되었고, 이후 ‘국가 디지털 경제 발전 시범지역’을 조성하여 2022년까지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해 4,5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신인프라건설’은 ‘2012년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sup>3)</sup>, ‘2014년 도시화 계획(国务院, 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 ‘2016년 시진핑 주석의 스마트 도시 건설 요구’<sup>4)</sup>의 확장판 정책이다.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번 정책이 기존의 도시화정책과 IT 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신인프라건설 정책에서는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과는 다른 점이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기업 및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범국가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 시행방안의 경우, 총 투자되는 2,700억 위안 가운데 2,100

3) 住房城乡建设部(2012), 关于开展国家智慧城市试点工作的通知

4) 2016년 4월, 정부 좌담회에서 성시별·산업별 스마트 도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언(要分级分类推进新型智慧城市建设)

〈표 3〉 상하이시 신인프라건설의 4대 추진 분야

4대 추진 분야	주요 내용
신인터넷	- 5G플랫폼을 활용한 무인공장, 무인자동차 등 무인시스템 구축, 인터넷 안전망 구축
신건설	- 3대 첨단산업(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신플랫폼	-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대규모 인공지능 플랫폼 등 구축
신스마트	- 교육, 소비, 교통, 물류, 의료 등 전 산업의 스마트화

자료: 上海市人民政府(2020), 「上海市推进新型基础设施建设行动方案(2020-2022年)」.

역 위안은 민간으로부터 유치할 계획이다. 시행 방안은 '이번 신인프라건설은 디지털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자본(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추진해야 할 4대 분야를 발표했다. 또한 주요 추진분야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을 명시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 직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알리바바(杭州), 텐센트(深圳), 비구위안(碧桂園)<sup>5)</sup>, 혜주(惠州) 등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는 우수한 기업이 본거지 지역의 주체가 되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혜주-비구위안의 사례를 보면, 비구위안 그룹

이 직접 혜주 스마트시티 계획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도시 내에 다른 협력기업을 모집하여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2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고, 4개의 도시 운영 플랫폼, 다수의 운영 서비스를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도시개발로 창출되는 이윤은 기업에 귀속되도록 하여 기업 스스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여러 지역의 스마트시티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방의 일부 대표 기업은 정부의 투자예산을 넘어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텐센트는 향후 5년 동안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신인프라개발'을 위해 5,000억 위안 가까이 투자할 예정이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향후 3년간 2,000억 위안(약 34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으로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기업

## 4. 시사점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때문에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기관 모두 참여해야 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최종 목적은 스마트시티 건설로 동일하지만, 민간의 참여는 차이가 있다. 민간 참여는 비단

중국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도시 구축에 참여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기업인 구글,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파나소닉, 자동차 제조기업인 토요타 등의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캐나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터프론트'가





대표적이다. 2017년 캐나다 토론토 정부와 알파벳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를 설립하고, 알파벳의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와 협력하여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교통 시스템, 오염물 배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자연환경의 변화까지 기술로 해결하는 도시계획에 사이드워크랩스는 약 4조 5,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9년 말까지 토론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sup>6)</sup> 일본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는 2020년 CES에서 일본 후지산 인근에 175에이커(약 70만 8,200㎡) 규모의 옛 토요타 자동차 공장터를 개발해 스마트 시티인 ‘우븐시티(woven city)’를 만들겠다고 밝

6) 도시의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민간사회의 반발이 거셌으나, 설명회 등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다.

혔다. 토요타가 개발하는 인공지능·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는 실제 도시가 될 전망이며, 이는 단순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사는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혁신 기술을 경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사업 제안부터 기획, 실행까지 주도하여 구축되는 이 도시 계획은 토요타 부지를 활용하는 도시 건설 계획에 토요타 자회사가 아닌 일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통신사, IT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여 지분교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우리도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는 재정지원과 규제 프리존 설정, 지역사회 의 인식변화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



를 고려해야한다. 중국의 경우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 비구위안 등 글로벌 대기업이 도시를 직접 계획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스마트도시는 IT 기술을 핵심으로 진행되어 IT 분야의 특성상 빠른 속도와 과감성이 중요한데,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은 자칫 최적의 의사 결정을 위한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사업 기획에 재원 또는 긴급자금 등의 차별적 지원 등의 정책적 독려수단을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또한 디지털 뉴딜은 5G, AI, 빅데이터 기술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국 정부가 기업에 도시 건설의 자율성을 용인해준 것처럼 향후 건설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은 자신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파나소닉의 SST(Smart Sustainable Town) 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sup>7)</sup> 파나소닉은 자신의 공

장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타운 건설을 위해 일본 내 각 분야의 최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스마트타운을 구축하였다. 환경시스템,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배치까지 고려한 스마트시티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우, 울산, 거제 등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전체의 업그레이드와 디지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SK의 용인 신규투자 발표와 LG의 마곡산 산업단지 조성 과 같이 기반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기업은 각 기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요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뉴딜과 발전 방향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포용적 혁신성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스마트 시티 건설에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정책의 핵심은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활용이다.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은 단순히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도시 개발단계에서부터 기술 테스트, 서비스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헤주 스마트 도시 건설 과정에서 헤주시 정부와 하얼빈 공업대

택이나 건물을 개발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한다. 반면 CRE(Corporate Real Estate)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장 부지 등의 사업 용지를 새롭게 주택이나 상업 용지로 재개발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한다. 가운데 SST는 파나소닉의 옛 공장 부지를 주택 단지 등으로 재개발하여 스마트타운을 조성한 CRE의 성공 사례이다.

7) 파나소닉의 스마트도시 전략은 크게 PRE와 CRE로 나누어져 있다. PRE(Public Real Estate)는 지자체 등이 조성하는 토지에 새로운 주

학<sup>8)</sup>은 혜주시에 국제 교육 과학 연구단지를 공동으로 설립했다.<sup>9)</sup> 단순히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실험실로 활용

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졸업 후에는 관련 산업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 역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설립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있지만, 실무와 이론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양성된 인재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8) 하얼빈 공업대학은 세계적인 공학계열이며, 특성학과 계열은 글로벌 7위의 우수한 대학으로 이미 선전, 웨이하이 등 신형도시에서 분교를 설립했다.

9) 凤凰网(2017.10.12.) 哈工大惠州潼湖建国际校区(<http://news.hit.edu.cn/2017/1013/c2110a185925/page.psp>)



이지연

소재산업실·연구원  
jylee@kiet.re.kr / 044-287-3903

〈주요 저서〉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제력 변화와 대응전략(2020, 공저)
- 신용합시대 유망 신산업의 국내 성장역량 분석과 과제(2018, 공저)